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및 질문·답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제가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당장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나?’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 번 연장해 보려고 헌법 개정하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그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

해관계, 말하자면 집권 연장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은 대통령인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자주 손대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아홉 번 헌법 개정을 했는데 비슷한 기간 동안에 독일은 쉰 번을 헌법 개정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1987년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아주 크게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그 밖에 사회·문화 등에서의 가치도 무척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헌법을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개정할 것이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 논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헌법 논의를 하기 위한 제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질문 ●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당에 도움이 되면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세간에서는 개헌을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인의 임기단축 문제를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개헌안이 결국 부결될 경우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책임을 지고 조기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정도로 열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이 개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하겠지요? 개헌과는 관계없이 임기단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이 부결된다는 것을 꼭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었을 때 그것이 불신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질문 ●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2월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개헌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지난 한 해 동안 개헌 얘기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개헌 논의가 무성했겠지요. 그러면 지난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임기 1년 남겨 놓고 저의 임기 동안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여야가 국회에서 지난 한 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비교적 많은 국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것을 쫓 챙겨 보니까 역시 개헌 문제를 못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될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시기가 아니면 헌법을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 고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안되게 어지럽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제안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갑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략적 제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개헌에 응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난날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는 안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야당의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 선거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미뤄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여론 지지가 앞서간다는 사정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론 지지가 앞서가고 있는데 왜 복잡한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당 지지와 개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략일 것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모두 2004년,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사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전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까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기를 죽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헌이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만 행사했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저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만을 착실하게 행사해 나갈 것입니다.

정략 얘기하는데, 거꾸로 반대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정부라면 5년 뒤인 2012년에 할 수 있습니까? 2012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2011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1년은 다음 대통령 임기 4년차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나서 4년차 들어가면서 개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새 헌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가까이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임기 남은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그때로 미뤄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할거냐는 것입니다.

지금 임기를 맞추어 놓고, 헌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학자들도 천천히 연구하고

정치권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해서 하나씩 고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략을 얘기하는데, 제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것도 정략입니까? 그리고 모두들 당선 안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1992년 14대 총선을 부산에 가서 치렀습니다. 이것도 정략입니까? 그리고 1995년도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될 것입니다.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버티면 못할 것도 없지만 저는 경기도에 연고도 없고 해서 불리하지만 부산 가서 출마했습니다. 도리를 좇아서 부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2000년 4월 총선 때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정략이라고 한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훤히 꿰뚫고 내다보는 그야말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로 봐줘야겠네요? 그러나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저 제 양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때그때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지난번 탄핵도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낭패를 보긴 했지만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한 것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뛰어들어 놓고 그 이후에 저를 마치 큰 공작의 대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는 결코 정략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정치를 할 때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저는 원칙대로 정치하고 원칙대로 경제의 법칙에 따라서 경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략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주 구구하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국민 설득작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야당 후보들을 대타협 혹은 설득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

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어떻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좀 안정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같은 편법들을 써서 정치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가다가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한 4년 동안은 비판·반대·견제 세력이 있기는 해야 하지만 국정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수준으로 여대국회로 해서 가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야 나라가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 대통령들은 대단히 안정된 입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자기 임기를 걸어 놓고 개헌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굳이 개헌 문제를 안고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초청했는데도 야당에서 안 오는 것을 보니까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라도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묵살하고 넘어가 버리겠다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토론거부 결의를 하고 함구령까지 내려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지요.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와서 토론하고 자기의 논리를 밝혀야지요. 장차 5년간 국

정운영을 맡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외면하면서 장차 5년의 국정을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다음에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개헌 논의한다고 밤새지 말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개헌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한·미 FTA,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들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국정현안에 전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적 정책이죠. 그래서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한·미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요새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컴퓨터 성능 소개할 때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멀티태스킹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정은 다 마비됐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헌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토론하더라도 생업에도 지장 없고 국가행정, 정치 다 지장 없

습니다.

저는 제 일정표를 언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경제·사회·문화 정책에 관련된, 특히 부동산·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것이 개헌입니다. 개헌 발의입니다. 개헌 발의도 하지 않고 제 임기를 넘겨 버린다면 그야말로 제 임기에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질 문 ● 개헌 문제 외에도 선거구제 개편 등 평소 강조해 오던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 저는 개헌 문제가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지역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자꾸 하자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어떤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헌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게 뭐가 불리하냐는 것이지요.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골치 아픈 의제들이 이것저것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그저 ‘노무현의 정략입니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정략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략의 내용이 설명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래 반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기한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나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4·13호헌선언 나왔을 때 모두 거기에 항거해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서릿발 같은 5공 정권에 맞서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창창한 역사, 창창한 미래가 앞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개혁이 필요한 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치 영역에서는 바로 개혁의 속도입니다.

필요한 개혁이 제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그리고 선두에 서서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

리가 '남미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헌,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는 전제로 기사 쓰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